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방안 연구

구영휘*, 김지덕**

요 약

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 for the Job Creation of discharged soldier

Koo Young Hui*, Kim Ji Deok**

ABSTRACT

Military officials in Korea are forced to change jobs early due to the retirement age after active service. Measures are needed in view of the 55% average employment rate of middle and long term soldier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last government of Park Geun-hye push ahead creating of 50,000 jobs in discharged soldier with policy, but the results were not great. Therefore, it is time to drastically change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large-scal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t the academic level. So it became necessary for discharged soldiers to actively review ways to build their own organizations. For such reasons, this study presents a measure to create job through food service, Security personnel training and Manpower provision business, Special Soldier Control and Training Center Operation business, Han River Water Cleaning Project, Caring business, and delivery business by establishing their own social cooperation to create jobs for discharged soldiers.

Key words : Discharged soldier, Job creation, Social enterprise, Social cooperatives

접수일(2018년 6월 2일), 게재확정일(2018년 6월 20일)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과

** 육군학생군사학교 210학군단(교신저자)

1. 서 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은 현역복무 시 계급별 정년의 적용으로 조기에 강제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특히 현역 군인들은 근무 및 주거여건,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 전반에 걸쳐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다가 생애주기 중 최대 지출시기인 40세 전·후에 많은 인원이 전역을 하게 되어 전직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 90%이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도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정 추진, 직무능력 향상교육, 군내 및 공공 취업직위 개발 등 다방면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절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현역들의 비전투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오로지 전투준비에 매진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과제 또한 현실적인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정착되고 있는 이 기회에 제대군인의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20여년 이상을 군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육군본부의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된 부서에

서 근무하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방안에 대해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제대군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제대군인의 전직관련 법률과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동안 추진한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분야에 대한 사업을 분석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접목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행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 방법은 4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제대군인과 관련된 법령, 제도에 대해 탐색하고 정부의 전직지원 정책과 각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업추진 사업, 제대군인의 취업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심층 깊게 연구하였다.

둘째, 이미 성공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적용가능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셋째, 제대군인들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육·해·공군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공가능성 및 제약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설립방안에 반영하였다.

넷째,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전직지원교육생 중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넓은 계급별 대표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 내용에 포함하여 구체화 하였다.

3. 기존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추진

3.1 기존의 연구사례 및 방향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학계의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100여 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및 법령 개정, 전직 교육 개선, 취업과 창업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는 최초의 시도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내용 중 본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11편에 대해 엄선하여 분석하였으며 제시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성희·임용환·전성현(2004.)은 「제대군인 집단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통해 공익 및 수익사업으로 안전전담 관리자, 경호·경비 사업,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제시하였다.

최진관(2005.)은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대 전·후 교육 강화, 제대군인 인력 정보센터 설치, 취업알선업무 연계화, 공공부문 취업 활성화,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제시 하였다.

윤희철(2006.)은 「제대군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대군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생성 및 운용, 개인에게 적합한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우선 대부 등을 제시하였다.

최병열(2007.)은 「직업군인 전역 후 취업증진 방안」을 통해 전직지원 교육기간 연장, 취업직종과 연계된 주문식 취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군외 위탁교육과정 확대, 취업지원 교육 후 인턴 취업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재형(2009.)은 「국방분야 아웃소싱과 제대군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 관련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사학술 연구,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대규모 훈련장 관리, 전투발전 연구, 전투실험, 교육훈련 통제와 군 관련 복지용역 사업으로 기존 아웃소싱인 시설관리, 근무지원, 전문 서비스(재무, 회계, 계약 등), 상용장비 정비, 물류체계 지원, 정보화 분야 확대 및 조달관리, 시설공사 감리, 저장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박재현(2012.)은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지원 조직을 국무총리 주관 위원회 설치, 공기업과 민간기업 일자리 확대, 군 관련 산하단체 및 군납업체에 제대군인 채용 의무화 추진, 초·중·고교의 안전관리 전담 교사(학교보안관, 등·하교 안전지킴이 등), 기숙사 사감, 수련원 안전요원과 교육지원 개선, 온라인 지원체계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복장규(2012.)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과 교육, 취업지원,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손영섭(2012.)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취업지원제도 법령 개선, 군의 전문화·특수화를 고려한 공공기관 취업직위 신설, 취업지원제도 조직 및 기능 개선으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부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간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 기능 재조정,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국가보훈처 직제로 개편, 교육기간 연장,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전직지원교육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남응우(2014.)는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군내 취업직위, 공공 취업직위, 민간 취업직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중 군내 취업직위에는 현역 간부직위 중 예비역으로 전환 가능직위 확보, 학군단 교관 및 행정관 직위 확대,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김기훈(2016.)은 「제대군인의 전문성 발휘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간군사기업(PMC) 신설, 전국 지역단위 화생방 재난대응본부 설치, 공익사업으로 참전용사 지원, 안보견학(유료 실탄 사격 체험), 민간인 특수훈련 체험(낙하산 강하 체험) 등을 제시하였다.

안장원(2017.)은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실태분석과 창업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창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창업상담, 창업정보제공, 창업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컨설팅 분야를 제시하였다.

3.2 기존의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 확보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계획

구 분	직 위	비 율(%)
계	50,000	100
군내 직위	8,390	16.8
방위 산업체	8,700	17.4
비상 계획관	829	1.8
사회적 일자리	3,450	7.0
민간 일자리	26,571	53.0
창업 및 해외취업	2,060	4.0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각 25,000개 직위확보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이중 국방부의 추진계획은 2012년 당시 이미 15,000개 직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0,000개 직위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표 2>와 같다.

<표 2> 국방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계획

구 분	계	군내 직위	공공 및 민간
계	25,000	10,500	14,500
2012	15,000	8,000	7,000
2013	2,000	340	1,660
2014	2,000	600	1,400
2015	2,000	610	1,390
2016	2,000	530	1,470
2017	2,000	420	1,580

<표 2>에서 보듯이 국방부의 목표인 25,000개 직위 중 이미 2012년도까지 15,000개 직위는 확보되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0,000개 직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안정적인 군내직위는 용역관, 군무원, 복지시설관리 등 2,500개 직위로써 25% 수준이며 공공 및 민간직위는 학군단 교관, 비상계획관, 안보정책자문위원, 방산 및 군납업체, 교수 및 교사, 정부시책사업, 민간기업 및 기관, 해외취업 등 7,500개 직위로써 75%수준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단순히 수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대군인들에게 안정적이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직위개발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국방부의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목표인 10,000개 직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으며 확보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미 2016년도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3> 국방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결과

구 분	목 표	확 보	누 계	확보율(%)
2013	2,000	727	15,727	62.9
2014	2,000	3,307	19,034	76.1
2015	2,000	2,933	21,967	87.9
2016	2,000	3,331	25,298	101.2
2017	2,000	2,445	27,743	111.0

이 중 제대군인의 연속취업이 불가한 민간기업과 기관, 해외취업 등 5,000여개 직위를 제외하면 그 심각성은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은 본 연구자들이 육군본부에 근무하여 최초로 추진하였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약하였다.

한 사례로 2013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건설협회, 해외취업진흥협회, 해외 진출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호주의 용접사 취업을 준비하였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지원을 받아 전주 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에 6개월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주간에는 용접기술과 야간에는 영어교육을 병행하였는데 최종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0명중 1명밖에 되지 않았고 9명은 용접기술은 취득하였지만 영어능력에서 미달되었다. 이렇듯 해외취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원만한 생활영어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가능하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자의 취업률은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방안

4.1 사회적 협동조합 소개

4.1.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조합원의 형태는 <표 4>와 같이 직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표 4> 협동조합의 유형

구 분	형 태	비 고
직원 협동조합	조합원	갑, 을, 병
생산자 협동조합	자재 구매	건설·건축업체, 사무용품 등
	판매	음료수·제과·생활용품 업체 등
소비자 협동조합	구매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서비스 이용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4.1.2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성격, 설립신고 및 인가, 시행사업, 법정 적립금, 배당, 청산 등이 <표 5>에서 보듯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표 5> 협동조합의 비교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 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재부 인가
시행사업	•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이상
법정 적립금	• 10/100 이상	• 30/100 이상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 산	•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귀속
비 고	보험업 제외	

4.1.3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 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인가, 사무 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사항은 <표 6>과 같다.

<표 6>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구 분	진행 분야	관련 사항
1단계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2단계	정관 작성	14가지 필수 기재
3단계	설립 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4단계	창립총회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5단계	설립인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
6단계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단계	출자금 납입	
8단계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4.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학계에서는 제도 및 법령 개정, 전직교육 개선, 취업과 창업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였다.

시대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되어 2017년 기준으로 700여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이미 정착된 조합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 보람도 느끼고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제대군인들은 조직생활의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4.3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계

4.3.1 조직 구성원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21일내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이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기본적 구성원은 제대군인이며 희망하면 그 배우자도 회원이 될 수 있고 조합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생산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설립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는 후원자들과 유급직원들까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출자금은 생산자 조합원의 경우 10구좌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소비자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납입하며 후원자 조합원은 납입할 의무는 없다.

조합원들이 이행해야 할 재산적 의무는 자본참여, 보증 책임, 협동조합의 이용 등에 관한 의무가 있으며 이중 자본참여는 조합원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최소화 하여야 한다.

조합원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조합에서 시행하는 8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정기교육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동영상 시청과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3.2 조직구조 및 운영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구조는 지역별로 분야별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일반 협동조합처럼 전국규모의 조합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조직구조는 이사회 예하에 3개국, 9개부와 감사실을 운영하는 구조이며 사업시행은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개념이다.

즉 사업을 관장하는 군(軍) 대행 사업국에는 병영 체험부, 안보 견학부, 지역행사 지원부를 두고 사회적 지원 사업국에는 먹거리 사업부, 인력양성 및 제공부, 기타 사업부를 두어 수익사업을 하도록 설계하였고 사무국에는 조직지원부, 기획홍보부, 사업지원부를 두어 조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조직운영은 지리적인 특성과 많은 제대군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수혜가 가능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룡대(충남 계룡)에 본사를 두고 계룡대 지점(충남 계룡), 통일대 지점(강원 원주), 무열대 지점(대구), 선봉대 지점(경기 용인), 자운대 지점(대전), 상무대 지점(전남 장성) 등 6개 지점을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3 시행사업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군과 연계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수행하는 사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사업들은 7가지 사업으로써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체험활동 지원」 사업 중 제대군인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육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16개 과제 중 안보현장 견학지원, 병영체험 지원, 특전캠프 운영, 지역행사 지원과 동참, 지자체의 나라사랑 체험학교 지원,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등 6개 과제이다.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군인이 대행해 준다면 현재 당면해 있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현역들의 전투력 발휘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귀농(어)한 제대군인들과 연계한 먹거리 사업으로써 이미 전국에 귀농(어)하여 정착한 400여명과 향후 귀농(어) 희망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들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 6개 지점에 납품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자 조합원은 판로가 안정적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귀농(어) 인원들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셋째, 제대군인들의 특성과 사회적인 현상을 고려한 경호·경비인력 양성과 요구하는 업체에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대군인들은 평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정신, 책임감이 강하여 경호·경비와 관련된 소양교육을 이수한다면 최고의 적임자가 되리라 판단되며 이러한 인력을 요구하는 업체에 제공하여 상생할 수 있다.

넷째,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군 첨단장비학과를 설치하여 졸업생을 관련분야 전문병 또는 부사관,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전문계 군 특성화고교가 서울송파공고 등 14개교가 있다.

그러나 군 입대를 앞둔 많은 장정들은 행정병, 운전병, 통신병, 의무병, 취사병 등을 선호하지만 전공학과를 다니지 않은 인원들은 그 뜻을 펼치기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초에는 수도권에 이러한 특기병 양성학원을 설립하고 이론교육 후 인접부대에서 실습을 통해 특기병으로 양성하여 입대를 한다면 제대군인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군에서는 후반기 교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장정들의 입장에서는 전문특기를 숙달하고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매년 서울시에서는 한강에 산재되어 있는 수중쓰레기 처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데 최근 집행예산은 <표 7>과 같다. 여기에는 현재 특전사 출신의 제대군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특전사 현역 장병들이 대민지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전사 출신과 해군 UDT, 해병대 출신의 제대군인을 활용한 한강 수중청소 사업은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표 7> 서울시, 한강 수중청소 집행 예산

구 분	2015	2016	2017
금액(천원)	267,932	560,000	360,000

여섯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육,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예산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호기로 판단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제대군인과 배우자를 활용한 노인 돌보미, 장애아동 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양성하여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의 수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택배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가정, 사무실에서 손쉽게 소평하고 물품을 받아 보지만 사회적으로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은 불안 심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실에 맡기도록 하는 한편 자녀가 혼자 있을 때는 특별히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에 충성을 다 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생활한 제대군인들이 택배 사업을 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조성이 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년에 100곳을 공개 모집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택배물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지원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4.3.4 자원 조달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원 조달은 일반 협동조합과 유사한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즉 수입은 사업 수입, 체험장 등 시설 임대료, 팸플릿, 로열티(지적재산권)이며 지원금은 공공지원(국가 등 직접지원금, 세제 혜택 등 간접지원)과 민간지원(기업, 재단, 개인)으로 구분된다.

설립 초기의 자본조달 방식은 정부의 보조금, 세금우대, 조합원의 출자금, 기업가나 자산가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며 사업 운영 또는 확장자금의 조달 방식은 정부보조금보다 대출자금을 활용하고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자립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4.3.5 법적·제도적 요인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로서 정관 작성은 목적,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와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해산에 관한 사항 등 14개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근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감독과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4.3.6 자립경영 및 마케팅 전략

자립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독립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런 경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자립경영 전략인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략수립은 조합의 비전 제시, 전략 수립, 실행계획 설정, 평가 순으로 진행되는 데 이러한 전략계획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적용한 것이 마케팅 전략이다.

따라서 자립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는 주력 사업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력사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해야만 경쟁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립은 설립 초기 출자금, 다른 조합과의 네트워킹 정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여부, 브랜드 여부, 킬러 콘텐츠 등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4.3.7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시 기대효과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크게 생산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의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생산적 효과는 국가적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효과는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인 참여를 통해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방과 병역관련 사업추진으로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사회문화적 효과가 창출되리라 기대된다.

4.4 중간 지원기관 운영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표 8>과 같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중간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전직교육원 예하에 (가칭)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조합의 설립부터 정착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임무는 설립 상담 및 행정지원, 기초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홍보 및 교육지원, 협업 공간 및 창업지원, 조사 및 정책제안·제도개선, 현장실험 및 사례 발굴,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지원, 모금역량 강화 및 기금 조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 군 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표 8> 전국 사회적 경제기업 중간 지원기관

구 분	중간 지원기관 명칭	연락처
서울	신나는 조합	(02)365-0326
경기	사람과 세상	(070)4763-0130
인천	시민과 대안연구소	(032)523-5418
강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033)749-3355
대구	커뮤니티와 경제	(053)956-5001
경북	지역과 소셜비즈	(053)956-5002
부산	사회적 기업 연구원	(051)517-0266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052)267-6176
경남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070)4194-1803
광주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062)383-1136
전북	전북 사회경제포럼	(063)251-3388
전남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061)281-0201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064)722-4843
대전세종	대전 사회적 경제 연구원	(042)223-9914
충북	사람과 경제	(043)222-9001
충남	충남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041)415-2012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자의 취업률은 55%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따른 고뇌의 결과이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직위 확보를 위해서는 군내, 공공, 방위산업체, 비상계획관 직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량으로 직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7가지 사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군부대내의 간부와 병사식당의 급식운영이다.

둘째, 전문용역이 가능한 군수관리로써 수리부속 보급, 정비, 수송관리, 해외파병업무 지원 등이 있다.

셋째, 정보화 분야로써 C4I, 전산관리, SW인증업무 등이 있다.

넷째, 교육훈련분야에는 전투훈련, 교육훈련 평가 및 대향군 대행업무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 근무지원 분야로써 해외파병부대 지원업무, 기지 내 취사 및 급식지원 업무 등이 해당된다.

여섯째, 시설관리 분야로써 군 및 복지시설, 의무시설, 경계, 교도소 관리 업무 등이 가능하겠다.

일곱째, 군사자문 분야로써 정책연구, 비상사태관리, 교리·번역·정보수집 및 처리업무 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대군인과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처음이기에 폭 넓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제대하는 군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가칭)제대군인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이 된다면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김지덕,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2] 홍선이·박동열·이성, “제대군인 취·창업 Best 요인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 [3] 손영섭,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4] 강예은, “한국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5] 원경찬, “제대군인 삶의 실태조사”, 육군본부, 2015.
- [6] 남응우,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7] 진성희,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8] Birchall, Johnston. *People-Cente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ian. 2011.
- [9] Defourny, J. & Nyssens, M. *Social co-operatives: When social enterprises meet the co-operative tradition*.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2013.
- [10] Mulder, M. & Orbons, D. *Competence Development in Cooperatives*. 2013.

————— [저 자 소 개] —————



구 영 휘 (Young-hwi Koo)

1985년 2월 목원대학교 행정학사
2000년 2월 목원대학교 정책학석사
2013년 2월 목원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과 교수

email : kyh90900@naver.com



김 지 덕 (Ji-deok Kim)

1995년 2월 대전산업대학교 공학사
2012년 8월 경희대학교 경영학석사
2018년 2월 목원대학교 정책학박사
현 재 육군학생군사학교
210학군단장

email : jdkim709@hanmail.net